

## 코스모폴리틱스로서의 지진방재 집합실험

이강원(저), 『재난과 살다: 대지진에 대비하는 일본 방재과학의 집합실험』

김환석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이 책의 제목에 포함된 “재난”은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재난 가운데 자연현상과 관련된 천재지변을 특히 “재해”라고 부른다. 사람의 실수 또는 부주의나 고의로 일어난 사고도 재난으로 보며 이때 인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말은 “인재”다. 그러나 올해 여름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의 북반구를 강타한 폭염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라고 간주되는데, 이때 기후변화는 인간이 발생시킨 온실가스가 주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자연재난인 “재해”로 불러야 할지 아니면 인공재난인 “인재”로 불러야 할지 애매하다. 어쩌면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제 지구 위의 어떤 재난을 가리켜 자연재난이냐 인공재난이냐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곤란해졌다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이 책에서 다루는 재난은 일본의 지진이다. 그러나 지진 자체가 아니라 대지진에 대비하는 일본 방재과학의 집합실험을 다루며, 이를 인류학적 민족지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책의 특색은 일반적인 인류학 연구와는 달리 행위자-연결망이론(ANT: Actor-Network Theory)에 따라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는 1980년대 초에 과학과 기술에 대한 학제적 연구분야인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의 한 접근으로서 출현하였고, 1990년대에는 근대성에 관한 인류학 연구로 확대되어 오늘날 이른바 인류학의 ‘존재론적 전환’을 촉진한 흐름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일본 방재과학을 인류학적으로

연구하는 이 책이 ANT를 주된 이론적 준거로 택한 것은 새롭지만 이상한 시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인류학이 아닌 과학기술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국내에서 ANT 접근에 따라 과학실험에 대한 본격적인 민족지 연구를 수행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매우 참신하고 선구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서평을 쓰는 필자는 인류학자가 아닌 사회학자로서 과학기술학 분야에 오래 관여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반가운 ANT의 사례연구다.

특히 책의 저자는 자신이 참여관찰한 일본의 방재과학 연구를 그냥 “실험”이 아니라 “집합실험(collective experiment)”이라는 개념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데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은 ANT 학자인 브뤼노 라투르가 2000년대 초부터 사용해온 개념인데, 오늘날 어떤 재난적 사건(예: 선박 기름유출 사고, 구제역 사건 등)에 대처하는 결정의 결과에 우리 모두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능동적 참여자로서 얽히고 관여되어 있을 경우에 이를 일종의 실험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다. 즉 실험실의 벽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사회 전체로 그 범위가 확대된 실험을 의미한다. 저자가 일본의 방재과학 연구를 “집합실험”으로 보는 이유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지진으로 인한 혼돈을 벗어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질서의 정치는 신, 사람, 사물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섞여 있는 총 집합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실험이기 때문에 저자는 “집합실험”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서 신은 “세계상(cosmogram)” 또는 질서의 기획이고, 사람과 사물은 이 세계상을 매개로 동맹을 맺으며 공존한다고 본다. 그런데 세계상들, 사람들, 사물들은 집합실험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합하기 때문에 그 결과 총 집합은 다른 실재가 되고 이에 따라 다른 질서가 출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결국 일본의 지진방재 집합실험이 어떤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 얼마나 다양한 총 집합의 실재와 질서가 출현하는가를 ANT 접근에 기댄 인류학자의 눈으로 관찰하고 추적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지진방재 집합실험의 추적을 위해 이 책은 학회 발표, 제안서, 논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주고받는 논쟁(2장)으로부터 시작하여, 필드와 연구소에서의 작업(3장), 스크린을 통한 지진의 상연(4장), 그리고 지역공동체와 공무원이 마련하는 방재계획(5장)을 연이어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집합실험은 한마디로 지진이 단일한 실재가 아니라 다중적 실재들로서 이를 구성하

는 다양한 세계상들, 사람들, 사물들은 계속 그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지진으로 인한 혼돈을 벗어날 질서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합실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다(6장). 특히 1995년의 고베 대지진의 전과 후가 세계상들을 갈라놓았고, 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새로운 세계상이 논의되기 시작할 것으로 저자는 예견하고 있다. 그는 지진의 총 집합 또는 집합실험의 역사는 이러한 새로운 세계상의 출현으로 그 시기가 나눠진다고 본다. 그렇지만 새로운 세계상이 출현했다고 해서 기존의 세계상이 대체되거나 새로운 실천들로 기존의 실천들이 대체되지도 않으며, 단지 실천을 이루는 사건과 장소와 사물들의 수가 늘어나서 총 집합이 더 확장될 뿐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지진방재 집합실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는 평가한다(363~364페이지):

집합실험이 계속되면서 총 집합이 확장된다는 점에서 총 집합은 여전히 비질서, 비종결, 비환원, 비성공에 머물고 있다. 지진의 총 집합은 상이한 세계상의 공존을 통해서 실천을 이루는 사건, 사물, 장소들의 수를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혹은 공통의 세계 및 질서(cosmos)에 이른 것은 아니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세계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식 역시도 상식(common sense)에 도달하지 못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혹은 ‘자연스러운 것’이 여전히 없다.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지진의 총 집합이 반드시 공동체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예견할 수 없다.

흥미로운 것은, 저자가 이러한 집합실험의 비종결이 의미하는 바를 과학과 국가가 질서의 정치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점이다. 집합실험은 ‘과학의 실패’ 혹은 ‘국가의 실패’라는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개될 뿐이며, 중요한 것은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집합실험이 민주적으로 나아가느냐 권위적으로 나아가느냐에 있다고 그는 본다. 그러면서 저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집합실험이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제안하고 있다(381~386페이지). 첫째, 실패를 통해 새로운 집합실험을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존재론들, 방법들, 상연양식들, 세계상들의 목록을 얻는다. 둘째, 새로운 문제에 대한 우려, 관심,

배려를 통해서 기존에 배제되었던 존재들을 불러들인다. 셋째, 관련된 행위자들이 목소리를 스스로 내고 집합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넷째, 새로운 사건, 사물, 장소들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흐름들을 만듦으로써 방재를 위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집합체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전쟁을 할 것인가 평화의 교섭을 할 것인가 정해야 하는데, 평화의 교섭이 점점 더 많은 외부의 실체들을 집합체의 공중으로 끌어들이어 새로운 질서의 정치를 시작하게 만들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책의 제목 “재난과 살다”에서 명사 “재난”과 동사 “살다” 그리고 격조사 “-과”에 대해 각각 저자가 부여하는 의미를 밝히면서 이 책의 전체적 의미를 요약해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재난”은 흔히 파괴, 소멸, 폐허를 연상시키지만, 이 책에서는 재난이 좋은 정치를 통해서 새로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련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세계를 생산함으로써 인류는 삶의 지평을 확대해왔기 때문에, “인류는 만물과 함께 재난 속에서 스스로를 창조하는 스스로의 피조물”(400페이지)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살다”라는 것은 ‘적자생존’처럼 어떤 주어진 생태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과정에서 비평형의 생태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다. 이러한 생태는 생활/생명으로 이분화되지 않는 신, 사람, 사물의 자유로운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삶의 방식’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서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격조사 “-과”는 ‘무엇과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집합실험은 신, 사람, 사물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도 행위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즉 우리와 함께 공동세계를 이루는 행위자로서 만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것이 ‘재난과 사는’ 인류의 새로운 윤리가 될 것”(406페이지)이라고 결론을 제시한다.

필자는 인류학자가 아닌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제시된 내용이 국내의 인류학에서 얼마나 새로운 연구이고 어떤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평가할 능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가 필자에게 익숙한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지니는 의미와 기여 그리고 몇 가지 의문점과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학적 관점에 서서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이 연구는 국내의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드문 과학실험에 대한 민족지 연구이고 특히 ANT 접근에

따라 수행한 사례연구로서 이론적으로도 매우 혁신적인 시도를 담고 있다. 더 나아가서 지진이러는 “재난”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점점 현실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세계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회과학계에서 아직 무관심하거나 역량이 취약한 재난 연구의 소중한 주춧돌 하나를 놓는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를 기점으로 앞으로 국내의 사회과학계와 과학기술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과 바라는 사항을 언급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연구가 일본의 지진방재 집합실험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을 추적하면서 연구하여 결국 끝에 가서는 “재난과 사는 인류의 새로운 윤리”를 끌어내고자 하고 있으나, 이 연구의 실천적 함의가 아직 추상적이고 매우 모호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점이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지진방재 집합실험은 아직 비종결 상태이고 전사회적으로 어떤 합의된 결론(“공동체”로 표현된)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비종결 상태를 애써 “실패”라고 평가하기를 피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실패냐가 아니라 집합실험이 민주적으로 나아가느냐 권위적으로 나아가느냐에 있다고 주장한다. 집합실험이 계속되면서 지진을 둘러싼 “총 집합”이 계속 확장되기만 하는 것은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야 하는 정치에서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물론 집합실험이 민주적으로 나아가느냐 권위적으로 나아가느냐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비종결과 비질서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재난의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과 좌절을 안겨주고 민주주의의 비효율성에 낙담하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권위주의에 대한 지지를 자극할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도 일본의 지진방재 집합실험을 인류학적으로 묘사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적어도 결론 부분에서는 그 장단점에 대하여 평가를 해보려는 적극적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가 밝혔듯이 인류학자도 이 집합실험에 참여하는 “행위자”라면, 어차피 이 논쟁적 실험에서 가치중립적 위치란 없으며 원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결국 누구나 실천적 개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저자가 끝 부분에서 “재난과 사는 인류의 새로운 윤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연구의 암묵적인 목적이 바로 이런 원대한 문제의식을 지향하고 있

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일본의 지진방재 집합실험 사례만으로는 재난에 대한 이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윤리를 끄집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의 창궐, 기술적 사고, 환경오염, 테러리즘 등 다양한 재난이 점점 증대하며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들 재난에서는 일부 공통점을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각각의 원인과 양상 그리고 대응방안에 있어서 각각의 특수성이 더 두드러진 특징일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예컨대 지진의 사례만으로(그것도 일본이라는 사회물질적 특수성 안에서) 재난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윤리를 도출해내는 것은 좀 무리한 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오히려 필자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적용범위가 크며 따라서 그로부터 인류의 보편적 윤리를 논해도 무리가 없는 재난은 바로 ‘기후변화’라고 본다. 1990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1차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지구적 이슈로 등장한 기후변화는 2010년경부터는 서구에서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우익포퓰리즘의 도전이 거세게 대두하여 치열한 논란에 휘말렸다.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미국의 공식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는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여름 북반구를 휩쓴 폭염으로 인해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단지 과학적 가설이 아니라 현실임을 체험하게 되었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듯 기후변화야말로 지구적인 재난이고 라투르가 말한 “집합실험”에 잘 맞는 사례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룬 일본의 지진 사례에서 도출한 결론이 재난에 대한 보편적 윤리로서 설득력을 얻으려면, 적어도 책에서 그 결론이 기후변화와 같은 더 지구적인 재난의 집합실험에도 대체로 타당하다는 점이 제시되면 좋았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의 이론적 함의 역시 독자들이 분명히 알아차릴 만큼 명쾌한 형태와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이 연구의 이론적 근거는 ANT 접근이다. 일본의 지진방재 집합실험을 사례로 하여 이 연구는 ANT학자 라투르가 1990년대 말부터 주장해온 “코스모폴리틱스(cosmopolitics)”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고 필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즉 어떤 세계상(=질서의 기획)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과 사물들이 동맹을 맺음으로써 지진의 총 집합은 특정한 실재로서 출현하는데, 새로운 지진의 발생으로 세계상은 계속 변

하고 이에 따라 사람과 사물의 동맹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진도 다중적인 실재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행위자들이 어떤 실천의 과정을 통해 다중적인 실재들을 하나의 공동세계 또는 질서로 점진적으로 구성하느냐가 바로 이 코스모폴리틱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이론적 함의는 여기서 그치는 것일까? 즉 “라투르의 이론이 역시 옳았다”는 것이 이론적 함의의 전부일까? 만일 그렇다면 이 책의 역할은 라투르의 이론에 대한 주석이나 사례 예시에 불과하다고 폄하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책의 경험적 연구에서 다루어진 새롭고 방대한 내용들이 결코 그런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투르 이론(또는 ANT)의 내용과 좀 더 명시적으로 이 책의 경험적 연구 내용을 대조해가면서 그 함의를 도출하고 정리하는 노력을 할 경우, 이 연구는 라투르 이론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또는 심지어 반박이나 재창조까지도 모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책의 저자는 이 훌륭한 경험적 연구가 지니는 풍부한 이론적 함의에 대해 좀 더 숙고하고 도출하는 노력을 통해 국내의 학계가 ANT 접근에 대한 독창적 기여를 할 능력이 있음을 국제 학계에 당당히 보여주는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넷째, 이와 관련하여 라투르를 비롯한 서구의 ANT 학자들(또는 더 포괄적으로 포스트휴머니즘이나 신유물론 학자들)이 안고 있는 약점의 하나가 비서구 학자들이 제기하는 ‘탈식민화(de-colonization)’의 문제의식이 약하다는 점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물질성, 관계성, 비인간, 존재론, 정동, 어셈블리지, 기술, 동물 등 이들이 조명해준 이슈는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는 데는 결정적 기여를 하였지만, 그런 이슈에 대한 논쟁의 조건은 거의 항상 서구중심적인 개념들과 문헌 내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논쟁의 조건과 그 맥락은 비서구의 사유로까지 확대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간’ 존재에 대한 가정과 일반화도 서구중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구적 전통 안에서 사유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서구에서 제도적으로 표준화 및 정당화된 문헌을 통해 물질성 이슈 등을 독해하는 것은 이와는 다른(그러나 동등하게 정당한) 비서구의 시각을 통해 동일한 이슈들을 다루는 것을 필연적으로 배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필자는 이 책의 저자가 기존 ANT의 이론적 시각 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탈식민적’ 인류학의 시각까지 갖춘 더 심화된 이론적 관

점으로 재난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미 인류학 안에서는 아르투로 에스코바, 마리오 블레이저, 마리솔 데 라 카데나 등 탈식민적 존재론을 추구하는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학자들이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정치생태학의 주제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재난을 이러한 탈식민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연구해볼 경우 그 결과는 기존 ANT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연구할 경우와 비교할 때 상당히 흥미로운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사실 ANT가 추구하는 ‘코스모폴리틱스’ 자체가 기존의 집합체에서 배제된 행위자들의 세계상과 목소리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더 좋은 공동세계를 구성해나가는 것이라면, 바로 이러한 시도 자체가 일종의 코스모폴리틱스를 실천하는 길이 아닐까? 또 그래야만 진정으로 “재난과 사는 인류의 새로운 윤리”를 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서평이니까 굳이 이런 의문점과 바라는 사항들을 덧붙이기는 하였지만, 이강원의 <재난과 살다>는 국내 사회과학계에서 여러 영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문제작이다. 재난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ANT의 존재론적 접근을 통해 처음 시도한 것이고, 과학기술학에서 인류학적 민족지 방법을 통해 과학실험에 대한 치밀한 사례연구를 보여준 것이자, 라투르가 주장한 ‘코스모폴리틱스’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 사물을 정치적 행위자로 간주하는 새로운 정치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이제 국내 사회과학도 국제 학계에서 가장 프론티어에 속하는 이런 연구 영역들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행위자’가 되었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국내 사회과학의 학문적 위기가 점점 고조되어 많은 연구자들의 의욕이 꺾이는 요즘의 분위기에서, 이 책은 국내 연구자의 진지한 학문적 열정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소중한 성과이고 국제 학계에서도 자랑할 만한 보기 드문 역작이다. 필자도 이런 연구가 국내 연구자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 아직 국내 사회과학계에 희망이 있다고 위안을 받으며 부디 독자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